

“대형마트 규제 완화 앞서 전통시장 살릴 대책이 먼저”

지역경제계 유통법 손질 앞두고 온오프라인 병행 지원 등 제언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혜택 강화 등으로 생태계 재설계 촉구

정부·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대형마트 세비 배송 혼용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앞서 경쟁력 개선과 구조적 체질 전환에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의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소비 확산, 생활 방식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총장(광주경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법 개정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만

며무를 경우 전통시장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지 어렵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피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총은 가장 먼저 광주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접

근성 문제를 지목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낮은 시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편의시설 미비 등이 여전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주문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 환경 변화까지 더해지며 전통시장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은 전통시장을 ‘장 보는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여가·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차장 확충과 노후 시설 정비, 화재·안전시설 보강 등 기반 시설 개선을 전제로 문화·체육·휴게 공간·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상시 문화 행사를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도 핵심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전통

시장 통합 배송·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공동 브랜드 개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교육·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상인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확대해 결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광주경총은 대형 유통 업체와의 상생 구조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특산물 기획전과 쿠폰 교차 사용, 고정 납품과 공동 구매 구조를 제도화하고 출점 규제를 지역 영향 평가·상생 조건 전제로 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실질 심사와 이행 점검을 위해 상생발전심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유통법 개정의 핵심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키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법 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세비 배송 혼용 움직임을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총연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기”라고 비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광산구 소상공인 금융 지원 5000만원 출연

광산구·광주신보와 특례보증 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승 광주신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광산구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한다.

광주신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9억 2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산구는 1년간 4.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광산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밀착형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진흥자금 30억원 응자 지원

2.12% 변동금리 업체당 3억원

광주시가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응자 지원에 나선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수출진흥자금 응자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응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재원 3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2025년 직접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지난해 이후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전시회 참가 등 시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다만 최근 2년(2024~2025년) 내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응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이며, 명품강소기업이나 일자리우수기업 등 시 지정 우대 기업은 한도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26년 1분기 기준 2.12%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의 저리로 이용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광주시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수출 실적과 매출액 비중, 해외 마케팅 활동 적극성 등을 종합 심사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응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 길을 넓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두.Diagnostics 등 다양한 디저트 만나 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고객들이 디저트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5일까지 최근 유행하는 ‘두.Diagnostics’(두.Diagnostics) 등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두.Diagnostics’ 팝업에서는 고객 수요가 많아 구하기 힘든 두.Diagnostics, ‘팀별’ 팝업에서는 선물용으로 적합한 웨일스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 협력사 물품 대금 7300억원 조기 지급

온라인 장터 운영 경기 활성화 촉진

삼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일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9일 삼성에 따르면 협력 회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8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국 특산품과 지역 농가 상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생산 제품 등이 판매된다.

이번 장터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E&A,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 17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과 지역 농가 상품, 삼성전자와 지원한 스마트공장 제품을 구매하며 국내 소비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임직원들이 총 35억원 이상을 구매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해나 기자 khn@

농협전남본부 설 명절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최근 신안 암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살피는 등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지역 400여 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소비(유통)

/농협전남본부 제공

‘먹거리 독과점’ 3개사, 거액 탈세 1500억 추징

53개 업체 3898억 탈세 적발

국민 먹거리라는 점을 이용해 가격 횡포를 일삼은 3개 업체가 거액 탈세로 약 1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 세무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현재 50곳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14곳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9일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총 3차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커졌다.

주류 제조업체 A사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A사 또 원재료 구매 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다. 추징액은 200억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설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 증가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 장거리 운전시 보험사 특약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고 나섰다. 평소보다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장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장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극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도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정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298.04 (+208.90)
↑ 코스닥	1127.55 (+46.78)
↑ 금리(국고채 3년)	3.267 (+0.034)
↓ 환율(US D)	1463.30 (-6.20) <오후 6시 29분 기준>